

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추진

장기고용·육아휴직·연구년 등 처우, 연구 강화
다음 주 토론회... 내년도 국립대병원 등 시범사업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집단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는 일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업무를 근로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옮기고 전공의의 수를 전문의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문의 전환 병원 추진계획을 밝혔다.

대형 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약 40%를 차지한 만큼 우리나라의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의대 증원 등 이슈가 표면화될 때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재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통해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문의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전

공의는 전문의의 수의 절반만 뽑도록 해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은 현재 1700명 규모에서 2027년까지 1000명을 더 증원한다.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전문의들의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임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도 뒷받침한다.

정부는 우선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는 한편, 인력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에 적용할 계획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중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공청회, 지난 8일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박 2차관은 "원래 전공의들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수련의 목표인데 현실은 수련보다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메꾸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수련 기간 내에 충분히 훌륭한 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프로그램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

“농촌을 위해 왕진버스가 찾아갑니다”

전북자치도, 13개 시·군 총40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4월부터 도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40회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시·도 중 최대 규모 사업량이다. 총사업비 9억6,000만원을 투입, 협약병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해 시·군별 평균 3회 이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농민, 60세 이상 주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협약병원 의료진이 직접 농촌지역을 방문해 양·한방 진료, 치과·안과 진료 및 물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협업사업으로 전국 총 138회, 3,266백만원이 투입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중 40회(29%)를 추진하게 된다.

전국 최대규모의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농촌

지역 도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민생과 현장 중심의 도정운영을 위해 구성된 ‘다 함께 민생정책 추진단(단장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의 민생정책 사업으로 농촌과 취약계층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선정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최대규모 ‘농촌 왕진버스’ 사업물량을 확보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교통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도내 농촌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과소화,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자치도, 용담호 수질보전협 발족식

전북자치도는 12일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시군, 유관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용담호 수질보전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추진방향 및 기관별 역할, 올해 중점 실천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진안군민 1만2600여명의 희생으로 2001년 10월에 준공된 용담댐은 진안군 용담면 금강 최상류에 위치하며, 총저수량 8억1500만㎥ 규모로 전북 5개 시군 120만명에게 물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전북자치도 및 수자원공사와 진안군이 협약을 맺고 용담호를 자율관리체제로 관리하면서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해 8월 13년간의 조류경보제를 발령하는 등 수질관리체계의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진안군 중심의 주민협의체를 용담호 유역으로 확대해 용담호 수질보전협의회를 구성했고,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제시, 제도개선방안 마련, 재원대책 검토, 민·관·학 공동 실천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창업기관협, 포스코 방문 전북 창업의 미래 모색

체인지업그라운드, 인큐베이팅 센터 등 주요시설 벤치마킹

도내 창업관련 30개 기관으로 구성 전북창업기관협의회가 12일 지역에서 혁신적인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포스코를 방문해 주목받고 있는 체인지업그라운드 및 제조혁신 인큐베이팅 센터 등 주요시설을 벤치마킹했다.

포항은 기초과학 연구를 담당하는 포스텍과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을 중심으로 창업, 보육, 투자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포스코 기업이 결합돼 국내 최고 수준의 창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먼저, 견학을 둘러본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은 2021년 7월 개관한 비수도권 지역 최대 규모의 벤처 인큐베이팅 센터로, 개관 14개월 만에 입주율 100%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 대표적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비수도권 최초 팀스태우를 조성해 현재 팀스기업 27곳을 포함해



전북창업기관협의회가 12일 지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포스코를 방문해 체인지업그라운드 및 제조혁신 인큐베이팅 센터 등 주요시설을 벤치마킹했다.

112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 개관 이후 수도권 12개 벤처기업이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개설하는 등 지역 창업생태계 혁신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포스코는 자체 보유한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해 벤처기업들의 창업보육, 제품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

하고, 벤처펀드를 조성해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게 투자하는 등 전주기 선순환 벤처플랫폼을 구축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견학을 마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포스코가 구축한 창업생태계 DNA가 전북 지역에 어떻게 심어져야 하는지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재훈 기자

자치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산업부 공모 선정, 국비 4억5,000만원 확보... 총사업비 9억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서 추진하는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부터 격년제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예비수소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판로개척, △컨설팅, △기업교육 등 기업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전국에서 7개 지자체가 신청해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4개의 지자체가 최종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비 4억5,000만원 확보했고, 총사업비 9억원(도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1차년도(2024년) 사업수행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2025년) 국비 4억5,000만원 추가 확보할 수 있어 2년간 최대 총사업비 18억

원(국비 9억, 도비 9억)을 지원하게 된다.

그간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한 청정수소클러스터, 수소화학국가산단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수소기업의 경쟁력 등을 높이는 지원책을 확대해 수소산업 뿌리 생태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도내 수소산업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소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전북 수소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의 수행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는 4월 중 도내 수소산업 분야의 기술력 또는 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수소연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10개 정도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우리 예비수소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